文대통령 "건설현장 사망, 후진국형 사고…노동자 보호 명심"

"건설 현장 사망 사고 감소 강력 의지 갖기를"

"중소 건설현장 관리…상시 현장점검 체계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정부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7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밝힌 뒤 "산업 안전 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 현장의 안전 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 점검 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면서도 "하지만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 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중 60%가 추락사다.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 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정부가 기울여 온 노력을 언급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감독해야 할 건설 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이낙연, 친문 지지층을 향해 "서로 상처 주는 것 자제했으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친문 열성 지지층을 향해 "그분들도 같은 당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지혜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빠의 목소리가 당을 과도하게 지배한다는 평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 선친도 지독하게 열성적인 당원이었다.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대충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팬덤에 대해 요즘 미국 대선 결과를 보거나 국내 정치를 얘기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모순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며 "트럼프가 지나치게 열성지지자 중심으로 정치한 게 폐해였다고 하면서 바이든 약점이 팬덤이 없는 거라고 비판한다. 어떡하란 얘기인지, 언론보도를 보면서 혼자 웃는다"고 감쌌다.

그는 또한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하며 친문 지지층을 '에너지원'에 빗댄 자신의 발언을 문제삼은 데 대해선 "금 전 의원의 충고와 충정은 내가 받아들인다"면서도 "그 인식이 모두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판을 하든 지지를 하든 양쪽 모두 에너지가 되는 것"이라며 "나 자신도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공격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포착하는것이 오만끼(기)로, 제일 먼저 알아챈다. 거기 걸리면 크게 상처받2게 된다"며 "동지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우상호 "11월 말 서울시장 출마 입장 밝힐 것…마지막 역할"

"女후보 가점 필요…장관에게 몇 퍼센트 줄지는 논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달 말께 서울시장 재보선 출마 입장을 밝히겠다고 17일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당 내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전제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며 "조만간 제 의사를 밝히겠다. 11월 말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당 내 경선에서 여성 후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선 "물론 저한테는 불리하지만 개인적인 유불리로 제도 취지를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 여성 가산점은 줘야 된다"면서도 "장관들에게는 몇 퍼센트를 주는지 아마 정해져있지 않을텐데 당 내 논의를 해봐야겠다"고 지적했다.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격인 우 의원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중앙당의 운영이 민주적으로 운영된 모습은 나름대로 저희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본다.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다"며 "저희들 세대에게 마지막 역할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다. 마지막 역할을 통해 성과를 내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면서도 "검찰이 월성1호기 문제를 수사선상에 올린 것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본다. 이런 형태의 수사 행태가 반복된다면 윤 총장도 적절한 시점에서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을 향해 "원전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판단해보겠다는 것은 검찰이 대통령 정책결정 위에 있겠다는 얘기인데 너무 과도한 접근"이라며 "정치인이 아닌 분에 대한 정치조사는 일시적 인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이 추진 중인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해제하는 법안에 대해선 "조금 오버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주호영 "김종인, 이명박·박근혜 구속에 대해 대국민 사과할 것"

"구체적 시기는 판단 중…오래 걸리진 않을 듯"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도 그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면서 김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 이전에도 수차례 우리가 국정을 맡고 있다가 탄핵을 당하고 국정을 넘겨준 상황, 우리 당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누차 말했다"고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시기는 더 판단해서 하겠다고 말했다"며, 보궐선거 전에 사과가 이뤄지냐는 질문에는 "그거까지는 모르겠다. 아마 그런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선 집권했다가 집권을 놓치게 되면 뭔가 잘못해서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차원에서 보더라도 사과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상대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상대방의 낙인 찍기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혁신 플랫폼에 대해선 "정치인들은 모두 자기가 선 입장에서 상황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선거를 가까운 시간 앞에 두고 당의 틀을 바꾸는 게 혼란을 일으켜서 실패한 예도 상당히 많다"고 했다.

이어 "깔끔하게 합쳐지면 선거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선거 앞에 혼란만 일으켜서 선거를 망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의 영입 등에 대해서는 "금 전 의원의 생각 자체를 잘 모르겠다"며 "금방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이 금방 이쪽에 와서 후보가 되고 이런 것은 쉽지는 않다"고 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